



주간통일정세 2011-06(2011.01.31~02.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北김정일·정은, 올해 첫 군부대 시찰(2/2, 조선중앙통신)

- 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를 시찰,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을 전한 것은 1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신흥기계공장 현지지도 이후 하루 만임.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원홍(보위사령관),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가 수행 (장성택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시찰을 수행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
- 이어 김 위원장이 김정은과 함께 군인건설자들이 건설한 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도 현지지도, 이 연구소 시찰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군 총참모장 및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 당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최태복(당비서)·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김정각,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국방위 국장) 이 수행

● 해킹당한 北사이트 운영진 본국 소환(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선양(瀋陽)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운영하던 북한의 실무자들이 김정일 부자를 비방하는 문구로 사이트가 해킹당한 사건과 관련해 본국에 소환됐다고 보도
- ‘선양의 조선족 사업가’는 “운영진이 규정을 어기고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대거 접속한 사실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운영진 일부는 귀국 후에도 무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일동향

- 1/22, ‘김병무(김형직군의대학장) 빈소에 화환 전달(1/22, 중통·중방)
- 1/30,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예술소조공연을 관람(1/30, 중통)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인 태종수(당 비서)·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
- 1/31,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1/31, 중통)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인 태종수(당 비서)·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현철해·리명수 대장 등이 수행
- 2/ 1, 함경남도 함흥시의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시찰)(2/1, 중통)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인 태종수(당 비서), 현철해·리명수 대장이 수행



- 2/ 2, 김정일·김정은, 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 시찰(2/2, 중통)
 -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원홍(보위사령관),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가 수행
- 2/ 2, 김정일·김정은, 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도 현지지도(2/2, 중통)
 -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군 총참모장 및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 당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최태복(당 비서),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김정각,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국방위 국장)이 수행
- 2/ 3, 김정일·김정은, 설명절음악회 관람(2/3, 중통)
 - 김정은을 비롯해 당과 군의 실세가 총출동, 직책으로 인물을 표기 하던 평소와 달리 참석자들을 전부 ‘동지’로만 호칭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을설 원수, 김철만 당 중앙위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내각 정치국장,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이 참석
 -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강석주 내각 부총리, 변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 비서, 리태남·김락희 내각 부총리,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도 동석

- 기타 (대내 정치)
 - 黨 중앙위 제1부부장 ‘박정순’(82세, 폐암) 사망訃告 발표(1/22, 중통·중방)
 - 김정일, 1.23 박정순 빈소에 화환 전달(1/23, 중통)
 - 「청년동맹」중앙위 제44차 전원회의, 1.25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보고)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26, 중방)

나. 경제

- 北, 美 식량지원 재개뎌 분배감시 수용 용의(2/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미국에 2009년 중단된 식량지원 사업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의 분배 감시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이 2009년 분배 감시 문제로 중단됐던 나머지 식량 33만t의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함.

● **北황해북도 대표단, 中헤이룽장서 경협논의(2/2, 흑룡강신문)**

- 리원일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황해북도 친선대표단이 지난달 26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방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리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가 헤이룽장 무단장(牡丹江)시를 방문해 북한의 여성 노동자 2천 명을 무단장 동녕(東寧)현에 파견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황해북도 대표단의 이번 헤이룽장 방문은 북한 노동자 파견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97년 이후 北·中 합작벤처 138개 설립(2/5, 연합뉴스)**

- 중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다른 인근국에 대한 투자보다 작은 규모이며,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미국 닉슨센터의 중국연구 전문가인 드루 톰슨 국장은 3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용한 파트너: 북한에서의 중국 합작벤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음.
- 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중국과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작고 성공적이지 않다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9천830만달러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힘.
- 199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설립된 138개 합작 벤처기업 중 불과 4개만이 중국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뤄졌으며, 분야별로는 138개 합작벤처 기업 중 41%는 광산 등 채굴산업에 집중됐고, 38%는 경공업, 13%는 서비스업, 8%는 중공업 부문에 각각 설립됐다고 전함.

● **北-中, 이달 중순 지하자원 개발 협정 체결(2/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짐.
- 대북소식통은 “북중 양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전날인 15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안다”며 “북측은 합영투자위원회가, 중국 측은 상무부가 서명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협정에는 구체적인 광산 목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금광과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된 무산광산, 희토류와 관련된 광산이 목록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정상화를 위한 ‘전국 고속도굴진 사회주의 경쟁 참가자들의 결의모임’, 1/22 현상주(「직총」위원장) 등 참가자 현지에서 진행(1/23, 중방)
- 남포시에 ‘유리병생산기지’ 새로 건설 및 본격생산 돌입(1/24, 중통)
- 北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과학자들, 컴퓨터입력기 개발(1/24, 노동신문·중방)
- 강계·해주기초식품공장 조업 10돌 기념 보고회, 1.23·25 各各 진행(1/26, 중방)
- 北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나노입자의 ‘입도분포분석기’ 새로 개발(1/26, 중통)
- 「직총」중앙총 제67차 전원회의, 1.26 현상주(「직총」중앙위원장/보고) 등 참가자 진행(1/26, 중통)
- 「농근맹」중앙총 제62차 전원회의, 1.27 평양에서 리명길(농근맹 위원장/보고) 등 참가자 진행(1/28, 중방)
- 北 안악군 청년전위들, 영농전투에서 선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결기모임 1.27 오국 협동농장에서 진행(1/28, 중방)
- 남포시 와우도구역, 자동흐름선으로 일체화된 유리병공장 건립(1/28, 중통)
- 北인민보안부·철도성, 1.28 백두산밀영 고향집에로의 결의모임 진행(1/29, 중방)
- 용악산생물공장·중앙동물원 종업원들, 1.29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결기모임 진행(1/30, 중방)
- 정방산종합식료공장·사리원기초식품공장 등, 1.29-30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결기모임 개최(1/31, 중방)
- 평양 중앙동물원에 수의병원(건축면적: 2,000㎡, 수술실·집중치료실 등) 새로 건설(1/31, 중통)

다. 사회·문화

● 북한도 설 황금연휴…“특별배급은 없어”(2/1, 연합뉴스)

- 설날부터 사흘이 연휴인 북한에서도 일요일인 6일까지 나흘을 내리 쉬게됐지만 명절용 특별배급이 거의 없고 물가상승이 심해 설 분위기는 예전보다 덜한 편
- 음력 1월1일을 중심으로 앞뒤 하루씩 사흘을 쉬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설부터 사흘이 휴일이고 주말과 겹쳐 3일부터 6일까지 나흘이 ‘황금연휴’이지만 일반 주민은 떡국이나 고기 같은 명절 음식을 맛보기도 어려운 실정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각 지역이나 기업소별로 재량껏 특별배급을 하는데 힘 있는 곳에서는 배급을 하고 없는 곳은 못하는 식”



이라며 “작년 설과 추석에도 특별배급이 거의 없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이날 대동강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술 ‘평양주’가 설을 앞두고 평양시민에게 공급됐다고 전했는데 이 같은 ‘명절배급’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을 것으로 추정됨.
- 사회주의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민속명절을 지내지 않던 북한은 1988년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 데 이어 1989년에 구정도 명절로 지정했으며, 2003년부터는 신정 대신 구정을 ‘기본 설 명절’로 지내왔다.
- 북한에서는 구정 이후 곧 다가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을 더 크게 지내는데,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생일이 (후계자) 김정은의 책임 하에 준비되고 있으며, 생일 행사의 일환으로 ‘정일봉 축포’ 행사를 준비하려고 (김정일 탄생지로 선전되고 있는) 백두산 정일봉 인근에 호위총국 요원들이 도착했다”고 전함.

● 北주민, 지도자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늘어(2/1, 연합뉴스)

- 북한 주민들이 급성장하는 시장과 외국 언론 매체의 영향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낮고 이집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 같은 사태의 조짐도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옴.
- 미국의 북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페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31일(현지시각) 탈북 주민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김정일 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미국과 동맹한 ‘남한식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나타났다고 밝힘.
- 연구는 중국과 남한에 있는 탈북 주민 1천646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짐.

● 北에도 ‘이집트 시위’ 휴대전화로 알려져(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집트의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소식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사정에 밝은 미국인 사업가는 “해외 곳곳에 체류하는 북한 인사들이 이집트 시위 소식을 북한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하면 다시 이 소식이 휴대전화로 널리 알려진다”고 말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북측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집트 시위 소식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임.
- 그러나 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는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인은 통화료가 비싸 본국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 어렵고, 통화가 100% 도·감청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반정부 시위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함.



● **北도 설명절·김일성 동상도 참배(2/3,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등)**

-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주석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를 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으며 김일성화(花)·김정일화전시관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설 풍경을 전함. 또 평양시민들이 꽃을 사들고 스승이나 친척, 친구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으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민속놀이나 체육경기를 즐기고 있고 극장도 ‘만원’이라고 덧붙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평양시 여맹원들의 옷놀이 경기 장면을 방송했는데 길쭉한 옷을 사용하는 남측과 달리 장기알만한 작은 옷을 쓰는 것이 눈길을 끄.
- 우리민족끼리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설을 맞아 옥류관에서 고기쟁반국수와 평양냉면, 철갑상어요리, 자라요리 등을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함.

● **전 주북영대사, 北시장서 정보교환 활발(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북한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제한 없이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라고 말했다고 보도
- 지난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시장에서 물건값만 흥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처형, 홍수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해 듣는다”면서 “지금은 이집트 사태가 장마당의 주요 화젯거리일 것”이라고 말함.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 재직했던 에버라드 전 대사는 “당시 평양에는 통일시장 같은 공식적인 시장과 ‘개구리 장마당(Frog Market)’이라고 불리는 비공식적인 시장이 있었다”며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의 입을 통해 외부세계의 소식이 장마당에서 전해지곤 했다”고 설명

● **北주민이1월1일 김정일 초상화 불태워(2/6, 데일리NK)**

- 북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힘.
- “올해 1월1일 북한의 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김정일과 김정숙의 사진을 불태우고 종이에 김정일을 비난하는 글을 적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지난 2일 한 탈북자로부터 단독입수했다”며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일부를 공개
- 이 매체는 “제보자는 함경북도의 한 시당 간부가 북한 내부에서 일고 있는 김정일에 대한 반감과 악화된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만수대에술단 삼지연악단 신년경축음악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성황리에 진행중(1/21, 중통)
- 北 제7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수단(정인철 체육성 부상, 1.22 카자흐스탄 향발(1/22, 중통)
- 김정일 생일(2.16) 관련 '제16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농구·태권도·넬뛰기 등 11개 종목) 개막식, 1.24 강능수(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24, 중통·중방)
- 北, △여성권리보장법(교육, 문화, 보건, 재산분야와 결혼 등 여성들의 권리보장) △아동권리보장법(사회생활, 가정 등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철도차량법(철도차량 생산과 등록, 운영 등 규제) 새로 채택, 발표(1.26, 중통·민주조선)
- '제37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빙상경기, 1.24~27 평양에서 진행(1/27, 중통)
- 北 '민주여성동맹' 중앙총 제59차 전원회의, 1.31 평양에서 진행(1/31,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캐나다, 작년 탈북자 42명 난민 인정(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모두 42명(58명 중 72%)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다고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난민 보고서 2010」을 인용해 전함.
 - 캐나다는 2007년 1명, 2008년 7명, 2009년 66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했으며, 이 기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난민 승인 비율도 10%, 23%, 57%로 증가
 - “현재 다른 탈북자 179명에 대해 난민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자는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 北, 부룬디에 중국산 무기 수출(2/2,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우크라이나 무기상을 통해 부룬디에 중국산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서방 외교관리가 1일(현지시각) 밝힘.
 - 부룬디 반(反)부패기구의 조사 결과, 부룬디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우크라이나 중개상인 ‘크랜포드 트레이딩’과 약 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계약 거래를 체결, 이 계약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50구경 기관총 약 60정이 포함됨. 이 기관총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뒤 북한을 거쳐 크랜포드 트레이딩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엔주재 부룬디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언급을 거부함.

- **北, 일본에 과거청산 관계정상화 촉구(2/2, 교토통신, 2/1, 노동신문)**
 - 일본에 과거 청산을 통한 관계정상화를 촉구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
 - 1일 게재한 논평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이 과거에 범한 죄악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 우리와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통해 관계 정상화로 나서도록 일본에 요구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북한은 올들어 북-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의 발언을 평가하는 등 대화 공세를 펴고 있음.

- **미국내 대북 식량지원 재개 논의 중(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국무부가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RFA이 정부나 민간단체 사이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
 - 한편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소식을 아직 듣지는 못했으며 5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의 식량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방북한다고 RFA는 전함.
 - 미국 정부는 2008년 지원하기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약 17만t을 전달했지만, 분배 투명성 감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2009년 3월 지원이 중단됨.

- **기타 (대외 일반)**
 - 北-中친선 설명절연환모임 개막식, 1.25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유홍재(駐北 中대사) 등 참가下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1/25,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1.25 새해 즈음 러시아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1/25, 중통)

나. 6자회담, 북핵

- **北, 이란보다 앞선 농축시설 수준 보유(1/31,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28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보고서를 제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
 - “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수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함.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전문가 패널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재위는 이를 검토해 정식 문서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됨.

● IAEA, 북핵문제 합의 시 사찰단 즉각 복귀(2/2, 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天野之)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핵문제 당사국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된 IAEA 핵사찰단 복귀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각) 밝힘.
-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을 당시 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으나, 이와 관련해 IAEA에는 접촉해 온 바 없다고 전함.

● 北, UEP 안보리 논의, 러시아 공식입장 아냐(2/2,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
- “러시아측은 조선(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인정하면서, 러시아가 조선(북)의 농축우라늄 생산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심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러시아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말함.
- 이 통신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참사와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1국 부국장이 만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힘.
- 앞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UEP 문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 러시아, 北 UEP 안보리 논의지지(2/5,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지지한다고 4일 밝힘.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욱 면밀한 국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6자회담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3. 대남정세

- **北, 남북 군사실무회담 내달 1일 개최하자(1/31, 연합뉴스)**
 - 북한군이 국방부로 전통문을 보내 남측이 내달 11일로 제의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1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것으로 드러남.
 - 국방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은 지난 29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2월1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 북측은 또한 실무회담 대표단으로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외 2명이 참가하겠다고 제의, 북측 단장은 리선권 대좌로 대령급
 -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회담일자는 당초 제의한 11일로 하자며 실무회담을 앞당기자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고, 실무회담 대표단을 대령급 단장 외 2명으로 하자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동의함.

- **北 “대화 조속개최”…통일부 “대응계획 없다”(1/31, 연합뉴스)**
 - 통일부는 31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이 조속한 남북대화 개최를 촉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음. 통지문은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낮 12시께 우리 측에 전달됨.
 -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우리 군대의 대범한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로 북남대화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조건에서 이제는 북과 남의 당국이 마주앉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 또 “북남회담을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들과 쌍방이 관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
 -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에 북측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오늘 통지문에 대해 특별히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함.

- **北,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제의(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통일부는 북측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가 1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는 설명
 - 조선중앙통신도 1일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남측에 촉구했다고 보도
 - 장 위원장은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문산에서 가질 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남조선 적십자사가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고



촉구, “우리 군대의 주동적인 제의로 북남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리게 된 조건에서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마주앉지 못할 이유와 조건이 없다”며 “남조선 적십자사가 우리의 동포애적인 결단과 선의의 조치에 화답해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하루빨리 협의, 해결함으로써 봄부터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사업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北조교, 우리공관에 남북대화 촉구 서한(2/1, 연합뉴스)**

-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총련)가 주중 한국대사관과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
- 지난 24일과 20일 주중 한국대사와 선양 총영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촉구

● **北민화협, 대북지원연합체에 방북 초청장(2/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가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에 초청장을 보내 방북 성사 여부가 주목됨.
- 박현석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최근 민화협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서에 포함시켰다”며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지난해 이뤄진 대북 수해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지원 방안을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통일부 승인을 받으면 이 단체 박종철 회장과 회원단체 회장을 포함해 6명이 방북할 예정
- 북민협은 소속 단체의 사무총장급 인사 2~3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평양에 열어 대북 지원물자의 분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해옴.

● **北, 회담협의 중에도 팩스 ‘선전공세’(2/1, 연합뉴스)**

- 남측 민간단체나 인사들에게 선전용 팩스를 무더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됨.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최근 80여개 남측 민간단체 및 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짐.
- 수신인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관련 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해 일부 방송사와 남측 위 관계자 등 총 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 가운데 40여 곳에는 연합성명도 첨부함.
- 북측은 중국을 통해 천안함 사건 때 40여건,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80여건, 연말연시 연하장 70여건, 연합성명 발표 당시 70여건 등 팩스를 남측 민간단체에 잇따라 발송한 바 있음.



● 남북 군사실무회담 판문점서 8일 개최(2/1, 연합뉴스)

-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오는 8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됨.
-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이 오늘 오전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일 개최하자고 다시 수정 제의했고, 우리측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힘.
- 실무회담의 대표는 대령급 실무자로 남측은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북측은 국방위 정책국의 리선권 대좌가 맡을 것으로 예상
- 군사실무회담은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이후 4개월여 만으로, 남북은 고위급 회담의 급과 성격,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
- 북측은 실무회담을 1일로 앞당기자고 수정 제의했다가 남측이 거부하자 8일에 개최하자고 다시 수정 제의함.

● 北최고인민회의, 南국회에 회담요청 편지(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한 데 따라 당사자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일 의원 접촉 및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남한 국회에 보냈다고 보도
- “편지는 참여한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을 제의한 데 대해 언급하고 이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 이어 “편지는 북남 사이에 군사회담이 개최되게 된 조건에서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주앉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남조선 국회가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에 적극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임.
- 또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6.15북측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종교단체 등도 대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남한의 여야 정당과 단체에 보냈다고 전함.
- 한중태 국회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로 편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도착하면 내용을 본 뒤에 대응 방안을 적절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편지가 남북회담 사무국을 거쳐 올 것으로 보고 있음.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파악된 게 없다. 판문점 채널로 온 것도 없다”고 말함. 6일 오후 현재까지 남측 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北매체 잇단 김정은 찬양…南 겨냥?(2/4, 연합뉴스·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을 우상화에 열을 올리면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겨냥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끄.
 -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금봉어’라는 작성자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대장의 사진을 보고’라는 시를 올림.
 - 이 시는 “김대장의 모습은 아주 당당하고 위엄에 넘친다는 것이다/만민을 품어줄 너그러운 인품/천하를 굽어보는듯한 영채 도는 안광/배짱과 자신감에 넘쳐있는 모습”라며 북한에서 ‘대장’으로 통칭되는 김정은을 묘사한 뒤 “이러한 령장(영장)이 통솔하는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강조
 - 북한 매체가 김정은을 드러내놓고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모두 남한 출신 인사들이 작성해 우리민족끼리에 올림.
 - 첫 김정은 찬양글은 지난해 11월, 1997년 8월 월북한 오익제 조평통 부위원장이 작성한 A4 2장 분량의 ‘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지난달 30일에는 비전향장기수 김동기가 ‘1월에 비낀 애국장정의 세계’라는 기고문 게재

- **北최성익, ‘이산상봉’ 적십자회담 개최 거듭 촉구(2/5, 연합뉴스·조선신보)**
 -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은 5일 올해 봄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면서 남북간 적십자회담 개최를 재차 촉구
 - 최 부위원장은 이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통이 크게 북남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봄부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시작할 의향”이라며 “우리의 회담 제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남측 적십자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북남 인도주의 문제에는 물자를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는 협력 문제가 있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가 있다”고 말해 적십자회담에서 식량 및 비료지원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부총리 “北, NPT 가입해야”(2/6)

-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5일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47차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은 고립되고 폐쇄된 사회로, 외부와 교역이 없는데 무슨 제재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이바노프 부총리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먼저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01년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이란이 2~3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는 없다”면서 “이란이 2013년~2014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 그는 이밖에 제재나 위협, 무력사용 등은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서 대화를 통해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北 UEP 안보리 논의 지지(2/5)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지지한다고 4일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욱 면밀한 국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우리는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6자회담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러시아와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UEP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北, 충분한 핵무기 보유 주장”(2/3)

- 북한은 자신들이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해 말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주장한 것



으로 전해졌음.

-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미 군축협회(ACA)가 발간하는 ‘오늘의 군축 (Arms Control Today)’ 최신호에서 자신의 방북 당시 북측과 가진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충분한 핵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에너지 목적으로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공장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북측이 대화나 대결에 모두 준비가 돼 있으며, 비핵화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1만 2천개의 사용전 연료봉을 한국에 판매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시설 복귀를 허용할 용의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거듭 평가했음.
- 그는 이어 2012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담에 북한이 참석하는 문제가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참석한다면 이는 주요 핵당사국들이 핵 투명성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모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北 “UEP 안보리 논의, 러시아 공식입장 아냐”(2/2)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러시아측은 조선(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인정하면서, 러시아가 조선(북)의 농축우라늄 생산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심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러시아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 통신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참사와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1국 부국장이 만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통신은 이어 “조선 측은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등의 정신,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나가는 변함없는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며 “쌍방은 조선반도 정세완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앞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UEP 문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中 외교부,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환영’(2/2)

-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북한이 오는 8일 고위급군사회담 실무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궁



정적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했음.

- 중국은 이날 정부 웹 사이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제목으로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올렸음.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관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이견을 해결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우리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건설적인 노력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남북 고위군사회담 실무회담 개최를 환영했음. 그는 “중국은 남북 쌍방의 접촉과 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IAEA “북핵문제 합의 시 사찰단 즉각 복귀”(2/2)

- 아마노 유키야(天野之)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핵문제 당사국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된 IAEA 핵사찰단 복귀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음.
- 아마노 총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IAEA로서는 일단 합의에 도달하고 나면 (사찰단 복귀에 필요한) 준비를 최단기간 안에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을 당시 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음.
- 아마노 총장은 그러나 북한이 사찰단 복귀와 관련해 IAEA에는 접촉해 온 바 없다고 전했음. 그는 또 IAEA가 “비핵화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꺼이 맡을 것”이라면서도 “IAEA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주요 당사국 간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해 북핵 당사국 간 합의가 선행해야 함을 시사했음.
- 아마노 총장은 “검증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라면 여기엔 매우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이 필요하나 우리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100%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음.
- 아마노 총장은 이어 시리아 역시 자국 내 비밀 핵시설에 대한 IAEA 전문가 접근을 계속 막는다면 특별사찰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음. 미 정보 당국은 시리아가 자국 사막지대에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북한이 설계한 핵 원자료를 설치했으며 이 시설이 2007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시리아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음.
- 아마노 총장은 이와 관련, 자신이 지난해 11월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에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北 4-7개 핵무기 분량 플루토늄 보유”(2/1)

- 북한은 현재 핵폭탄 4-7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음.



-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 발간한 ‘북한의 핵무기, 기술적인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애초 30-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5-6kg씩을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의회조사국은 “핵무기 한 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6kg으로 봤을 때 북한은 애초에는 5-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했다가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지금은 4-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앞서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그 당시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은 37kg이라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했으나, 이런 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음.
-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 방북 미국 전문가 일행에게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북한내 다른 지역에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경우, 불능화 이후의 최종 단계인 핵생산 시설의 해체 및 폐쇄와 관련해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탄두 폐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다”면서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치와 관련한 검증 조항의 불명확성 및 분열성 물질, 탄두, 우라늄 농축시설, 핵실험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 없어”(2/1)

-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지만, 현재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어떤 기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과거 우리가 북한과 가졌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논의에서 난제 중 하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히 전달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인도적 지원 물품 분배와 관련된 모니터링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 그는 북한이 뉴욕채널을 통해 식량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을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음.

- 앞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방한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물었다고 우리 정부 소식통이 밝힌 바 있음.

● “北, 美 식량지원 재개땐 분배감시 수용 용의”(1/31)

- 북한이 미국에 2009년 중단된 식량지원 사업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의 분배 감시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했다.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이 2009년 분배 감시 문제로 중단됐던 나머지 식량 33만t의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미·북 관계에 정통하다는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은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는 2008년 5월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머시코’ 등 미국의 4개 비정부기구를 통해 모두 16만9천여t을 북한에 전달했으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분배 감시요원의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북측과 이견을 빚어 2009년 9월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VOA는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北-中, 이달 중순 지하자원 개발 협정 체결”(2/6)

- 북한과 중국이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6일 “북중 양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전날인 15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안다”며 “북측은 합영투자위원회가, 중국 측은 상무부가 서명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외자 유치에 관한 전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합영투자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한 기구로, 작년 말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황금평 및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 소식통은 “협정에는 구체적인 광산 목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금광과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된 무산광산, 희토류와 관련된 광산이 목록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북중 양측은 협정 체결 후에 홍콩에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며 “중국 측은 당국이 나서 북한 당국과 합의한 뒤 민간기업



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나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작년 1~11월 북중 교역액이 30억6천124만 달러에 달해 이미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8년 교역액 27억9천300만 달러를 9.6%나 초과했음.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석탄·철광석 등 광산물 비중이 30%를 넘어섰음.

● “97년 이후 北.中 합작벤처 138개 설립”(2/5)

- 중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다른 인근국에 대한 투자보다 작은 규모이며,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 미국 닉슨센터의 중국연구 전문가인 드루 톰슨 국장은 3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용한 파트너: 북한에서의 중국 합작벤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음.
- 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중국과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작고 성공적이지 않다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9천830만달러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는 한국에 대한 투자액 12억달러, 태국에 대한 투자액 2억7천300만달러, 베트남에 대한 투자액 4억3천700만달러 등보다 작은 것임.
-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집계 방식이나 집계 주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왔음. 톰슨 국장은 중국의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불과 2개 회사만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중국 투자자들은 중.소기업인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는 국영기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그는 199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설립된 138개 합작 벤처기업 중 불과 4개만이 중국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영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음. 분야별로는 138개 합작벤처 기업 중 41%는 광산 등 채굴산업에 집중됐고, 38%는 경공업, 13%는 서비스업, 8%는 중공업 부문에 각각 설립됐다고 전했다.
- 그는 이런 자료를 현장조사와 중국 투자자 인터뷰, 공개된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수집했다면서 합법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투자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북중간에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호 불신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에 무역과 지원, 투자를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투자로 자신들의 채굴산업을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임.
- 그는 또 중국의 합작벤처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북한에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이와 함께 좀 더



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합의된 통일에 대한 가능성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이 일어난다면 일련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정치·경제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그 자체라고 지적했음.

● “中, 北 안정·자국이익 위해 ‘햇볕정책’ 추구”(2/4)

- 미국 평화연구소(USIP) 존 박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과거 한국이 취했던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SIP 한국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연을 통해 “한·미가 대북관계에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경제협력 강화 등 대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특히 박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 추구라는 큰 목적도 있지만, 낙후된 동북 3성 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하자원이 풍부한 함경도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이라는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더라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더라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감싸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임.
- 그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이 도발을 해도 (국제사회의) 직접적 대응을 모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식 대북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관계에서도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고삐를 죄어 주길 바라는 미국의 대중 압박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그는 ‘중국이 대북 지원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평판에 손상을 입더라도 지금과 같은 북한 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음.
- 그는 또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경제지원 패키지라는 개념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조건이 있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종속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황북도 대표단, 中헤이룽장서 경험논의(2/2)

- 리원일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황해북도 친선대표단이 지난달 26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방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흑룡강신문이 2일 보도했음. 신문은 황해북도 대표



단이 이날 저녁 쑨야오(孫堯) 부성장 등 헤이룽장성 간부들과 만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쑨 부성장은 이 자리에서 “헤이룽장성은 조선(북한)과의 교류와 협작을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농업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음.
- 리 위원장은 “최근 들어 양측의 교류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협작을 확대해 더욱 진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음.

라. 일·북 관계

● “北, 일본에 과거청산 관계정상화 촉구”(2/2)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일본에 과거 청산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일 게재한 논평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이 과거에 범한 죄악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 우리와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음.
- 이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통해 관계 정상화로 나서도록 일본에 요구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킹 미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오늘 방한(2/6)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6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음. 그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킹 특사는 특히 오는 8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다자의 교조정관을 각각 면담하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2004년 미 북한인권법 성안을 주도했던 그는 2009년 대북인권특사로 임명됐으며 미국 내 탈북자 정착 및 북한인권법, 대북식량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킹 특사의 방한은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임.

● 한미연합훈련 때 ‘北 WMD제거’ 연습 확대(2/4)

- 한국과 미국은 올해 실시되는 양국 연합훈련 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확대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올해 3월 실시되는 키 리졸브(KR)



다. 미·일 관계

● “美日 공통전략, 한국 등과 안보협력 명기”(2/5)

-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통전략 목표 책정때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다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5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올 봄으로 예정된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보협력위원회에서 마련할 새로운 ‘공통전략목표’에 우주공간의 안전 이용과 사이버 공격 대책의 협력을 포함하기로 했음.
- 또 미일 동맹에 한국과 호주 등을 포함한 다국간 안전보장협력 강화도 명기할 방침임. 이는 양국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군비 증강을 계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미일 공통전략은 양국 동맹에 관한 기본정책으로 2005년에 책정된뒤 개정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담당 심의관급 협의에서 올해 개정하기로 결정했음.
- 양국의 새로운 공통전략은 오는 6월께 미국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임.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미일 정상회담은 당초 5월초 열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일본 측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6월 하순으로 하자고 제안해 일정이 다시 조율되고 있음.

● 日법원, 美기지 야간비행 중지 소송 기각(1/31)

- 일본 대법원이 주일 미군기지의 항공기 야간·아침 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음. 3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오키나와(沖縄)에 있는 주일 미군 가테나(嘉手納)기지 주변 주민 466명이 낸 ‘가테나기지 폭음 소송’ 상고심에서 미군 항공기의 아침·야간 비행중지 요구를 기각했음.
- 이에 따라 가테나 기지 주변 주민 5천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미군 항공기 야간·아침 비행 중지 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만 인정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음. 2심인 후쿠오카(福岡)고검은 지난 2009년 원고의 대부분인 가테나 기지 주변 5천51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국가에 모두 56억2천7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으며, 원고 가운데 466명은 아침·야간 비행 중지를 요구하며 상고했었음.
- 가테나 미 기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거점으로 F15전투기 등 약 100기가 상주하고 있으며, 소음발생 횟수는 연 4만회 안팎에 달함. 이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끊이지않고 있으며 오는 3월께는 기지 주변 주민 2만2천명이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기·심야 비행 금지와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수백억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나하(那覇)지방법원에 낼 예정임.



라. 중·일 관계

● 日, 中문제 자문기구 설치..관계 개선위해(2/4)

- 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의 충돌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총리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했음.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에 관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자문에 응할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에다노 관방장관은 “단기적인 문제보다 일중(중일) 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하고자 간담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음.
- 6일 첫 회의에는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전 게이단련(經團連) 회장과 안도 구니타케(安藤國威) 소니생명보험 회장, 이케다 모리오(池田守男) 시세이도(資生堂) 상담역, 사카네 마사히로(坂根正弘) 고마쓰(小松)제작소 회장, 나리타 유타카(成田豊) 덴쓰(電通) 명예상담역, 요다 다쓰미(依田巽) TY리미티드(음악·영상 등 콘텐츠비즈니스 회사)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중국의 경제 문제를 논의함.
- 이밖에도 작가 이시카와 요시미(石川好)씨,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전 중국 대사,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도쿄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들도 간담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간담회는 또 10월10일 신해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문화·인재 교류를 활성화할 방안 등을 논의해 5월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직전인 4월까지 보고서를 낼 예정임.

● “中日, 20개월 만에 전략적 대화 재개키로”(2/2)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말 외교차관급 전략적 대화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양국 간 전략적 대화는 2009년 6월 이후 20개월 만임.
- 도쿄에서 열리는 회담에는 중국 측에서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할 예정임.
- 양국은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5월 정상회담 전에 열리는 전략적 대화를 통해 센카쿠열도 주변 충돌 방지책을 협의하는 등 관계 개선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방위계획 신(新)대강’을 설명하고, 중국 측이 센카쿠 갈등 이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가스전(중국명 춘샤오<春曉>) 조약 체결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서 일본 측은 지난달 말 반노 유타카(伴野豊) 외무 부(副)대신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전략적 대화 재개 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중·러 관계

● 러-中 송유관 가동 본격화..131만t 공급(2/4)

- 지난달 1일 본격 가동된 러시아-중국 송유관을 통해 지난 한 달 131만 8천t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에 공급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음. 통신은 영하 40℃까지 떨어지는 혹한에도 러시아에서 중국 동북지역을 잇는 송유관이 안정적으로 가동돼 지난 한 달 이같은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공급됐다고 전했다.
- 러시아산 원유의 첫 중국 기착지인 헤이룽장성 모허(漠河)해관의 관리자는 “혹한의 날씨에도 애초 계획했던 것처럼 하루 평균 4만2천t의 러시아산 원유가 러-중 송유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원유 품질도 양국이 합의한 기준치에 부합돼 공급을 둘러싼 마찰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
-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시베리아 아무르주 스코보르디노에서 헤이룽장의 석유기지 다칭(大慶)을 잇는 1천km 구간의 송유관을 완공, 지난해 11월 시험 운영한 뒤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했음.
- 이 송유관은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총연장 4천700km)의 지선으로 러시아가 스코보르디노에서 국경까지 67km 구간을, 중국이 국경에서 모허 기지를 거쳐 다칭까지 이어지는 930km 구간을 각각 맡아 건설했음.
- 중국은 이 송유관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연간 1천 500만t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음. 이 송유관의 최대 운송 능력은 연간 3천만t이어서 양국 합의에 따라 공급량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세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이 송유관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원유 수출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음. 경제 성장에 따라 소비량이 급증하는 중국은 지난 한해 2억t이 넘는 원유를 수입, 자급률이 45%로 떨어지는 등 해외 의존도가 해마다 심화하고 있음.

바. 기 타

● “5월 정상회담서 韓中日 투자협정 체결 합의키로”(2/6)

-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나 투자 자유화 등 규칙을 담은 투자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이후 국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중에 발효시킬 방침임. 한·중·일 3국이 이같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는 처음임.
-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는 틀임.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관세나 세관 절차 등 폭넓은 분야를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체결하기 쉬움.

- 한·중·일 사이에는 양국간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돼 있지만, 중·일간 협정에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걸점으로 지적돼왔음. 한·중·일 3국은 2007년 3월 투자협정 교섭을 시작했고 오는 3월 도쿄에서 13회 회담을 열 예정임.
- 한·중·일 경제계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음. 이전에는 주로 일본이나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 협정의 필요성이 커졌음.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액은 2009년보다 36% 늘어난 590억 달러에 이르렀음.
- 한편 신문은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산(産)·학(學)·관(官) 공동 연구도 애초 내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까지로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는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학·관 연구회는 3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